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국토부, 소방청	
담당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과장 노혜원, 사무관 신용현 (044-200-2056, 2058)
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과장 전창현, 사무관 박완섭 (044-200-2346, 2348)
	국토부 건축정책과	과장 남영우, 사무관 이경민 (044-201-3755, 3765)
	소방청 화재예방과	과장 조선호, 사무관 송호영 (044-205-7440, 7441)

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로 재난을 사전 대비한다.

- ▶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 135동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평가 시행
- ▶ 저층부 외장재 교체시 시공비 이자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
- ▶ 고층 건축물(2,315개소)에 대해 연1회 전수점검 실시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(약칭: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하여, 「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」 등을 심의·확정하였다.

* 참석자 : 국무총리(주재), 외교부·국방부·행안부·문체부·복지부 장관, 국조실장, 기재부1·교육부·과기정통부·산업부·고용부·국토부1 차관, 법제처장, 원안위 사무처장, 소방청 차장 등

□ 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,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.

○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,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,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에 따라,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.

- 화재안전성능평가는 △화재 안전시설 △건축물 마감재료 △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△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,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, 지자체,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.
-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,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&D를 통해 개발·보급할 계획이다.
-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, '건축물관리법'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'지역건축안전센터'를 설치하고,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그리고,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·홍보도 집중 시행한다.
-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·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 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,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,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.
- 소방청은 국내 2,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.
-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 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다.

※ 별첨 :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대책